

‘발전 5사’ 단일법인 통합 권고 탈석탄 전환 대응 구조개편 시동

기후부, 한전아트센터서 중간보고회
삼일회계 “현 체제론 NDC 한계”
학계·노동계도 통합 필요성 공감
정부, 7월 최종 구조조정안 수립

정부는 전력공기업 구조개편 밑그림이 공개됐다. 에너지 전환기와 탈석탄 시대를 맞아 현재의 발전 5사 분할 체제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진단과 함께, 이들을 단일 법인으로 완전 통합하는 방안이 공식 권고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삼일회계 법인을 통해 추진해 온 과제다. 연구를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현행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체제가 경쟁 유도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 내부의 ‘각자생존식’ 중복·과잉 투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1사 완전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회사 구조’ 등을 비교 검토해 최종 ‘1사 완전 통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분산된 재무구조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무탄소 전원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500MW 규모의 해상 풍력 사업(총사업비 약 3조 7500억 원)에 개별 발전사가 단독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이 평균 48% 급증한다. 이로 인해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국내 전체 용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자체 개발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중심의 소극적 의무 이행에 머물러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 공동취재사진

실정이다. 발전 공공성 약화도 데이터로 증명됐다. 강세훈 한국서부발전 기획본부장은 “한전 분사 당시 64%에 달했던 발전사의 국내 설비 비중이 현재 33%까지 떨어졌다”며 “지난해 한전 전력 구입량 중 발전 5사 비중은 31%에 그친 반면, 민간은 37%를 차지해 위상이 크게 축소됐다”고 했다. 조영상 연세대 교수 역시 “최근 전력 도매 가격(SMP) 결정 시간대를 보면 민간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합 공기업의 시장 독점 및 가격 결정권 왜곡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단일 법인 체제만이 고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204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0기가 대거 폐쇄되는 상황에서, 공기업 간 인력이동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현 구조로는 대규모 실업을 막을 수 없고, 단일 법인 내에서만 규제 없이 직무 전환과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조측도 단일 체제 통합을 적극 지지했다. 남대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발전 노동자들에게는 ‘20년의 기다림’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며 “통합 법인의 자본력을 모아 민간이 90% 이상 독점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

너지 시장에 공공이 본격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통합을 위한 세부 로드맵과 국민 관점의 명분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시영 단국대 교수는 “현재 안은 공기업 입장의 서술에 치우쳐 있다”며 “국민 편의’와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명확히 해야 추후 발생할 노노·노정 갈등을 풀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합 법인이 사업 양수도를 받는 방식인지 신규 법인 설립인지, 민간과의 기존 연료 도입 계약 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디테일한 시간 계획 타임테이블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중앙대 교수는 과거 LH 등 거대 공기업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물리적 통합 후에도 내부 보수 체제나 조직 문화 차이로 수년간 별개 기관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실질적인 화학적 결합을 위한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 내용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계·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합 방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미, 35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 시동

한미전략투자공사 세종서 출범식
에너지·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
美 제조업 재편 속 韓기업 지원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 동맹을 첨단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대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KUIC, 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조선 등 양국이 합의한 핵심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협력이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위치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옥에서 공사 창립기념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 등 한·미 양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사 출범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투자 MOU’의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법)이 1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간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정관 마련, 조직 구성, 직원 채용 등 공사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공사는 미국 제조업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해 양국 간 전략적 자산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념사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거점으로 함께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를 향해 “단순한 자본투자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가 되어달라”고 주문하며,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양국 간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에너지·조선 등 합의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김 AMCHAM 회장 역시 “공사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적인 투자와 성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암참 역시 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출범이 양국 경제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사의 기반을 이끌 초대 이사진 인선도 함께 발표됐다. 경영기획본부장에는 강중석 전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공정책기획단 부단장(전 국회 경제산업조사실장)이, 전략투자본부장에는 김경한 전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공사 창립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박종원 한미투자전략공사 사장, 구부총리, 제임스 김 암참 회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영일 한국투자공사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뉴시스

영덕에 대형원전, 기장엔 첫 SMR 들어선다

(소형모듈원자로)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 후보지 확정
주민 여론 앞선 두 지역이 최종 낙점
한수원 “지역 상생 최우선 고려”

과거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선정됐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군이 10년 만에 대형 원전 유치에 성공했다. 부산 기장군에는 대한민국 미래 원전 생태계를 이끌 첫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들어선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위원장 손양훈, 이하 평가위원회)는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 평가 결과, 대형 원전 2기 후보부지로 경북 영덕군을, SMR 1기 후보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최종 선정했다.

대형원전 부지 선정 공모에는 경북 영덕군, 울산 울주군 2개 지역이, SMR 부지 공모에는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2개 지역이 신청해 경합을 벌였다. 평가

위원회가 부지·환경 기초조사와 현장조사,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부지적정성·환경성·건설적합성·주민수용성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결과, 승부처는 ‘주민 여론’이었다.

대형원전 부문에서는 영덕군이 종합점수 91.01점을 받아 울산 울주군(82.63점)을 큰 점수 차로 제쳤다. 영덕군은 주민수용성 중 주민여론조사(5km 이내/박)와 부지적정성·환경성 분야 등에서 울주군을 압도했다. 한때 원전 지정 구역이 해제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영덕군으로서는 이번 유치 성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맞붙은 SMR 부문에서는 기장군이 87.11점을 획득해 경주시(84.56점)를 따돌렸다. 기장군은 건설적합성과 환경성에서 경주시에 뒤졌으나, 부지적정성, 주민수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첫 SMR 건설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번 신규원전 부지선정은 지난해 2

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이후 치밀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4월 정책·인문, 환경, 원자력, 지질·지진 등 전문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후 모든 기준 수립과 심사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올해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시작했고, 유치 공모 마감 이후 평가위원회는 신청부지에 대한 부지·환경 기초조사(4~5월), 현장실사(5월), 주민 여론조사(6월)를 실시하는 등 약 5개월간 정밀 검증을 거쳤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소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후보지 선정 이후 갈등 관리를 한수원에 주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만공사, 입주·수급업체 안전 교육

신항 배후단지 안전협의회 개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연계 실시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8일 부산항 신항 늘레랑쉼터 안전교육장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및 수급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공동으로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도 연계해 실시했다.

이번 안전협의회는 배후단지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입주업체와 수급업체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회에 이어 진행된 법정교육에는 배후단

지 내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필수 점검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물류창고 및 하역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이뤄졌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